

업종전문화 시책의 활용과 효율적 운용

吳性重*

신정부가 들어선 이후 대규모 기업 집단을 긴장시켜 왔던 업종전문화 정책이 지난 10월 29일 “대규모 기업 집단의 업종전문화 시책 추진 방안”으로 산업정책심의회에서 의결, 확정되었다. 同政策은 주력 업종에 속하는 주력 기업에 자금 조달, 기술 개발, 공업 입지상의 규제 완화 등의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기업 집단의 역량을 경쟁력있는 분야로 집중케 하여 기업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월 18일에는 업종전문화 시책 추진을 위한 세부 시행 방안인 “상공자원부 고시(안)”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30대 기업 집단은 상공자원부 고시 시행일(11월 18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주력 업종 및 주력 기업을 선정하여 상공자원부 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 말 많던 업종전문화 정책이 이제 시행 단계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기업 집단은 새로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지원 폭 확대

이번에 확정된 업종전문화 시책의 내용을

보면, 지난 6월 신경제 5 개년 계획 중 산업 발전 전략상에서 계획되었던 내용과 비교할 때 당시 운위되었던 주력 기업 선정 조건 중 기업 공개 여부, 소유 분산 정도, 재무 구조 상태 등의 조건이 제외되어 상대적으로 지원적 성격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주력 업종의 선정 범위를 규정하는 업종 분류도 예상보다 더 넓게 설정됨으로써 30대 기업 집단은 주력 기업 선정상에 여유를 얻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주력 업체 제도와 비교해 보아도 30대 기업 집단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투자 분야에 좀더 신축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보다 많은 주력 기업이 좀더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첫째, 주력 업체 제도하에서는 업종 분류를 세분화함으로써 기업 투자나 부동산 취득시 및 신기술 개발 투자시 규제 완화의 혜택에서 업종상의 제한을 받았는 데 비해, 주력 업종 제도하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크게 완화된다.

둘째, 동일한 기업 집단 내에서라도 주력 업체 수보다 주력 기업의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 있다.

셋째, 주력 업종 제도하에서는 국내 및 해외 금융 조달의 원활화, 공업 입지상의 규제

* 수석연구원, 서울대대학원 경제학 석사, 경제 발전론 전공

<표 1> 주력 업체 제도와 주력 업종 제도의 주요 내용 비교

	주력 업체 제도	주력 업종 제도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관리제도의 30대 계열 기업군(대출금 기준) - 계열별 3개 이내 주력 업체 선정(주거래 은행이 신청받아 협의 결정) ·(추가 선정) 비주력 계열사를 완전 매각시 2개 이내 추가 선정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상의 30대 기업 집단(자산 총액 기준) - 기업 집단별 2-3개 주력 업종 선정, 자율 신고 - 주력 업종에서 同業種 전업률 70% 이상, 매출액 비중 10% 이상인 기업을 주력 기업으로 선정 가능 - 주력 기업 추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기업 선정 요건에 미달한 계열 기업이 同要件 충족시 주력 기업 확정 통보일로부터 1년 후 그 기업을 추가 선정 가능 · 비주력 업종 계열사를 상당수 매각시 1개 주력 업종 또는 주력 업종에 속한 비주력 기업을 주력 기업으로 2개 이내 추가 선정 가능 - 따라서 주력 업체수보다 주력 기업수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음.
업종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73개 업종으로 분류 - 주력 업체는 제조업 위주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개로 대분류 - 유통·운수·창고 등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도 주력 기업으로 선정 가능 (단, 농수산, 금융·보험, 기타 서비스 등 3개 업종은 제외)
유도 시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 한도 관리에서 제외 - 기업 투자(기업의 신설, 매입, 출자, 합병 등) 관련 규제 완화 - 부동산 취득 규제 완화(주력 업체 사용 및 주력 업체와 유관한 부동산 취득시) - 자구 노력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력 업체의 유상 증자에 계열사가 참가시 · 주력 업체가 영위 업종과 직접 관련된 신기술 개발 투자시 · 주력 업체가 제품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공장 및 그 부대 시설용 부동산 취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신 한도 관리에서 제외(기업 집단별로 3개 이내 주력 기업에 한정) - 국내·해외 금융 조달의 원활화 - 공정거래법상의 출자 한도 규제 완화 - 공업 입지상의 규제 완화 - G7 프로젝트 등 기술 개발 사업에의 참여 확대 - 자구 노력 의무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투자 및 부동산 취득시, 공장용 부지 취득시

완화, G7 프로젝트 등 기술 개발 사업에의 참여 확대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주력 기업에 대한 지원의 폭이 확대되었다. 또한 주력 업체 제도하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3 개 이내의 주력 업체에 한정되었으나, 주력 업종 제도하에서는 “여신 한도 관리에서의 제외” 이외의 다른 지원은 3 개 이상의 주력 기업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주력 업종 제도하에서는 출자 한도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대규모 기업 집단은 출자 총액 한도 규제를 덜 받으면서 동일 업종 내의 주력 기업간에 상호 출자를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주력 기업은 유력한 자금 조달처가 늘어난 셈이 된다.

그러나, 업종전문화 정책이 이상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만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도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대규모 기업 집단이 주력 업종으로 특정 업종을 집중적으로 선택할 경우에 야기될 편중된 투자와 그로 인한 과당 경쟁이다. 따라서, 정부는 그러한 부정적인 면들로 인해 야기될 수도 있는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항상 보완책을 신속하고도 신축성있게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당초 목적과는 달리 정부의 지원 수단이 별효과를 보지 못하고, 경영 자원이 낭비될 가능성도 있다.

주력 업종 선정의 기준

30대 기업 집단은 내년 1월 중반경까지 주력 업종을 선정해야 한다. 현재의 주종 산업

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성장성을 감안하여 아직 소규모이지만 기진출해 있는 다른 산업을 선정해야 할 것인가. 보기에 따라서는 매우 쉬울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가 주력 업종 선정에 깔려 있다. 그러면 주력 업종을 선정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고려해야 할 것인가. 이하에서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①사업 목표, ②업종전문화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관련 다각화 정도, 경영 자원과 관련하여 ③경영 자원 확보의 용이성, ④장래 투자 규모 및 투자 스케줄 등에 한정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사업의 목표, 즉 안정성이나 성장성이나 또는 수익성 제고나 시장 점유율 확대나 등에 따라 주력 업종 선정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30대 기업 집단의 현행 주종 사업들은 대체로 해당 시장에서 상당한 위치를 잡고 있다. 따라서 해당 사업들은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주종 상품들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수명 주기상의 위치는 성장 말기나 성숙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안정성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수익성 제고를 사업 목표로 삼는다면 30대 기업 집단은 현재의 주종 사업들을 주력 업종으로 선정하여 기술 개발과 고부가가치화를 추구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성장성과 시장 점유율 확대를 사업 목표로 삼는다면 현재의 주종 사업이 장래 빠른 성장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진출하고 있는 업종 중 규모가 작더라도 빠른 성장이 기대되는 즉, 성장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을 주력 업종으로 선정해야 한다.

둘째, 해당 업종 분야에서 관련 다각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가 주력 업종 선정시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다각화가 용이하나 아니냐가 장래 해당 사업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다각화의 범위나 가능성을 예상해 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겠지만, 선진국의 산업별 다각화 예를 찾아보면 5 - 10 년 정도의 앞을 내다볼 수는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주종 사업에서 관련 다각화의 범위가 좁고 가능성이 적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사업은 주력 업종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자금, 공업 용지, 기술 등 경영 자원을 기업 집단의 계열사들이 자율적으로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력 업종 선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상기 경영 자원은 금번 업종전문화 시책에서 정부가 지원할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산업이 주력 업종으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어느 업종의 계열사들이 수익성이 좋아 내부 유보 상태가 양호하고, 충분한 공업 용지를 확보하고 있으며, 기술 개발 능력이 우수할 경우에 경영자원 확보 차원에서 굳이 해당 업종을 주력 업종으로 선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지 못한 계열사들이 많이 포진된 업종을 주력 업종으로 선정하는 것이 경영 자원 수단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리라 판단된다.

넷째, 장래 투자 규모와 투자 스케줄이 주력 업종 선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어느 특정 업종에 막대한 투자가 계획되

어 있고, 또 투자 스케줄이 빨리 잡혀 있을수록 그 업종은 주력 업종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력 업체 제도하에서 여러 기업 집단들이 대규모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화학 회사를 주력 업체로 선정했던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지원 활용 수단 강구가 중요

주력 업체 제도에서 주력 업종 제도로의 산업 정책적 변화는 기업에게는 중요한 경영 환경의 변화이다. 변화된 경영 환경 속에서 불리한 쪽을 어떻게 회피하고, 유리한 쪽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기업의 장래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로는, 정부가 기업의 사업 운영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규범적인 문제를 차치하면, 업종전문화 시책은 분명히 30대 기업 집단의 입장에서 유리한 경영 환경의 조성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대규모 기업 집단은 이 유리해진 경영 환경을 전문화를 제고하고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30대 기업 집단의 당면 과제는 주어진 정부의 지원책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데에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이 주력 기업에 한정해서 제공되기 때문에 주력 기업의 수를 늘리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주력 기업의 수를 늘리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주력 업종 내에서 전업률이 70% 이상이면서 매출액 비

중이 10% 이상인 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이에선 비주력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 주력 기업 선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과 동일 업종 내의 계열 기업들간 조정, 통합을 통하여 同要件을 충족시키는 방법이 있다. 다른 하나는 비주력 업종에 속하는 상당 수의 기업을 매각함으로써 주력 기업의 수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는 대규모 기업 집단의 사업 구조의 효율성과 경영 성과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첫째, 주력 업종 내의 사업 구조가 사업별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효율적이도록 짜여져 있어 각 사업별 계열사들의 경영 성과도 양호하다면, 이들 비주력 계열사 중 일부에 투자를 집중시켜 주력 기업으로 키워 가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력 업종 내의 사업 구조가 사업별로 분리, 운영되는 것이 비효율적이도록 되어 있어 상당 수의 각 사업별 비주력 계열사들의 경영 성과가 불량할 경우에는 이들 비주력 계열사간 조정, 통합의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주력 업종에 속한 기업들의 경영 성과가 부진하고 그 장래성도 불투명할 경우에는 이들 비주력 계열사를 매각하여 주력 기업의 수를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일부 기업이 현재의 경영 성과는 좋지 않지만 장래가 유망하다면 매각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주력 업종을 바꿀 수 있고, 그 기업이 주력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 효과, 정부의 효율적 시책 운용에 달려

업종전문화 협의회가 기대하는 바에 따르면 업종전문화 시책은 ①주력 기업의 대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② 관련 다각화를 통한 범위의 경제 실현 및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③ 주력 업종에 대한 경영 자원 집중으로 기술 혁신 촉진, ④ 주력 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정부의 규제 완화 조치로 주요 업종에서의 투자 활성화 기대, ⑤ 기업 집단간의 비합리적인 경쟁의 소지 축소, 대기업간의 수평적 협력과 대기업·중소기업간 수직적 협력 증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과 같은 기대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한 정부의 정책적 의도가 대규모 기업 집단에 수용되어 긍정적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물론, 30대 기업 집단은 대체로 업종전문화 시책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이나 유도가 없어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수익성을 높이는 데에 기업이 알아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왕에 시작된 정부의 시책이니 만큼 대규모 기업 집단은 적극적 태도를 가지고, 정부 시책이 안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 시책에 소극적 태도를 계속 견지하여 사업이 위축될 경우에 오히려 다른 기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뒤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집단의 긍정적 태도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부단한 정부의 효율적인 시책

운용이다. 그 효율성은 업종전문화 시책상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살리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은 업종전문화 시책을 잘 활용하면 현재 및 장래에 국제 경쟁력을 키워 사업을 더욱 번창시키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을 기업 집단이 갖게 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정부의 효율적 시책 운영을 가능케 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업종전문화 시책의 규정이 공정하고 충실하게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책 운영의 투명성이 유리알처럼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 집단은 업종전문화 시책을 따를 경우에 시현될 자신의 미래를 예상해 볼 수 있고, 정책 운영의 불투명성에서 오는 불안 없이 정책적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부는 지원 수단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에 용이하게 수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업종 전문화 시책의 성공을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만큼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최근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에서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 규제 완화와 관련해 많은 기업들이 완화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도와 정책이 본래 목적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 데에 있다”고 지적된 점도 그 중요성을 시사한다. 同調査에서 기업인보다 공무원의 그에 대한 응답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점도 정부의 정책 운용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업종전문화 시책이 시행에 들어간 이후 정부는 계속 그 성과를 진단하여, 그 결과가 同施策에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때 성과 진단은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기업 집단의 경영자들과 격의없는 논의를 통한 것이어야 한다. 보완책이 요구될 때 정부는 즉각 대응해야 하고,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同施策을 지체없이 폐기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 때 시책의 효과를 높이고, 시책의 리스크를 줄이든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30大 기업 집단(자산 총액별 순위)

순위	기업집단명	순위	기업집단명
1	현대	16	효성
2	삼성	17	동국
3	대우	18	삼미
4	럭키금성	19	한라
5	선경	20	한양
6	한진	21	동양
7	쌍용	22	코오롱
8	기아	23	진로
9	한화	24	동부
10	롯데	25	고협
11	금호	26	극동
12	대림	27	우성
13	두산	28	해태
14	동아	29	벽산
15	한일	30	미원